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농업과 농촌·농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농민의 삶은 그 어느 정권때보다 피폐해졌으며, 농업과 농촌은 파산 일보직전에 놓여 있다. 이에 한 농연은 지난 7월 20일 제7차 도회장단회의에서 현 정부의 총체적인 농정실패를 규탄하고 농민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9월 9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국민의 정부 집권 5년동안 실패한 농업정책 그 실체를 보자.

‘국민의 정부’ 집권 5년 실패한 농업정책

『김대중정권 농정실패 규탄을 위한 400만 농민 1차 총궐기대회』
오는 9월 9일 서울에서 개최!!

○ 국민의 정부는 IMF사태를 빌미로 농업분야를 정책우선순위에서 철저히 배제하였다.

‘국민의 정부’ 출범전인 97년말에 발생한 IMF사태로 인해 경제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IMF로 인해 농산물가격하락과 농가부채 누적 등 사상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던 농업분야는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철저하게 정책우선순위에서 배제되었다.

○ IMF 극복 후에도 대통령 농정공약이 스스로 추진되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의 핵심적인 농정공약이었던 농가부채 해결과 마사회 농림부 환원 등 주요 농정 현안 역시 IMF해결 이후로 유보되었으나 결국 경제회복 이후에도 추진되지 않아 2000년 11월 21일 전국적인 농민궐기와 시위에 의해 농가부채특별법이 제정되고 마사회가 농림부로 환원되었다.

○ 새로운 농업투자정책 부재 및 농업예산 확대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역대 어느 정권보다 전체 예산대비 농업 예산을 10%이하로 끌어내렸다.

‘국민의 정부’ 하에서는 과거 김영삼정부에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결단을 내려 시행했던 42조원 투자와 같은 획기적인 농업투자가 부재한 것은 물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경제·예산부처의 농업예산 배정에 대한 견제가 더욱 심해지는 등 농업회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예산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UR 협상 이후 김영삼 정부 하에서 농업구조개선을 위해 투자된 42조원에 대한 실사작업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진 극히 일부의 부실 사례를 가지고, 마치 이 자금을 지원받은 농민 모두가 도덕적 해이에 빠진 양 과장보도하며 새로운 농업투자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회분위기를 유도하였다.

92~98년간 진행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46조2,385억원의 투융자 중 농민에게 직접 보조된 것은 2조6,386억원으로 5.7%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사회간접자본 및 공공부문에 보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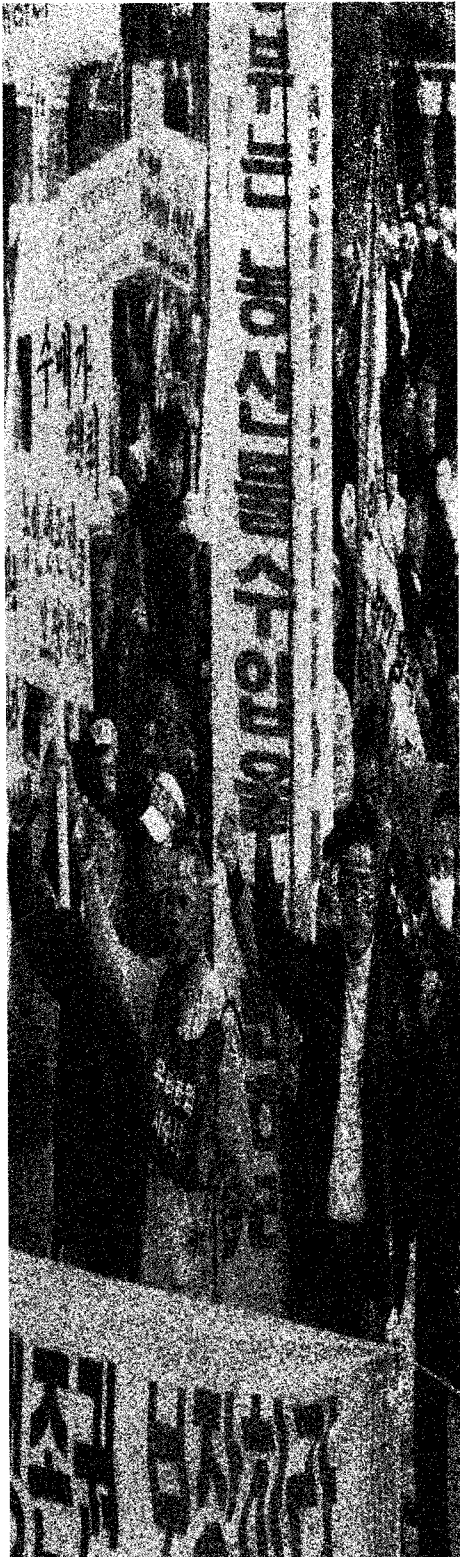
○ WTO 협상 및 한·칠레 FTA추진 등 400만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업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 심지어 중국 마늘협상과 한·칠레 FTA에 추진에서 보듯 농민



● 국민의 정부 농업예산 증가율

(단위 : 억원)

구 분	99	00	01	02
국가 전체예산(A) (증가율 : %)	92조1,937억원	99조1,299억원 (7.5)	106조4,864억원 (7.4)	111조9,767억원 (5.2)
농림부문 예산(B) (증가율 : %)	7조7,650억원	8조1,623억원 (5.1)	8조8,100억원 (7.9)	9조2,851억원 (5.3)
비율 (B/A)	8.4	8.2	8.3	8.3



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이면합의·밀실험상 등 농민과 국민을 속이며 농업개방정책을 강행하였다.

중국마늘 협상에서 농민을 속이고 이면합의 한 사실에서 보듯이 우리농업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없으며 심지어 2004년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로 개방해야 한다고 정부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언하는 등 농업경시풍조를 조장하였다.

또한 FTA가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도 선진 각국이 자국의 농업보호를 위해 피해가 큰 품목을 제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 정부의 경우 농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과 외통부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한국농업을 일시에 붕괴시킬 수 있는 한·칠레 FTA 협상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 시장지향형 농정을 표방하며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 공공부문인 농업에 국가적 책임을 방기하여,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농업과 농민을 사지로 내몰았다.

자타가 인정하듯이 우리 농업의 대외경쟁력이 아직 대단히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농업도 완전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에 맡기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등 농업을 살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투자확대는 염두에 없고 특히 경제부처의 경우 우리농업이 과잉보호로 인해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억지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 농산물생산비 보장대책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이 부재하여 농가부채 누적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 농가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농산물가격불안정을 해소하고 농산물생산비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과 대책이 없으며, 대표적인 예로 수급불균형으로 가격과동

이 충분히 예측되었던 쌀에 대한 가격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시장기능에 맡기고 있다. 또한 농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농가소득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설정 및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아예 부재하며 매년 도시근로자와 비교한 농가소득의 통계수치나 발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 농촌복지정책의 미흡으로 인하여 농촌공동화 현상과 이농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농촌은 농가소득보장 미흡은 물론 농촌지역의 의료, 교육, 문화, 교통, 치안 등 농촌복지차원의 대책이 대단히 미흡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이 이농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으나 농촌교육과 의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범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인농연**

『김대중정권 농정실패 규탄을 위한 400만 농민 1차 총결기대회』

- 일 시 : 2002년 9월 9일 (월)
- 장 소 : 서울
- 주 최 : (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규 모 : 각 도연합회별 회원대비 50% 동원목표 (약 45,000여명)
- 주요 요구사항
 - 마늘농가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협상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 쌀농가 소득안정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 정부와 정치권은 농가부채 책임져라!!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 농업예산을 국가예산대비 10% 이상 상향조정하라!!
 - 농어촌복지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 국회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 수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라!!